

# 박홍근, “송영길, 조속 입국해야…결과 따라 상응 조치”

“정치인이면 무한책임 자세 지녀야”  
“알았건 몰랐건 소상히 말할 필요”  
“지금은 지켜보는 게 필요한 시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조속히 입국해 해명, 설명 과정을 밝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체류 중인 송 전 대표가 내용을 입장을 우선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으며, 사안에 관해선 “결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응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송 전 대표 거취 관련 취재진 질의에 “(송 전 대표) 본인 입장에서 사실 관계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캠프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치인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게, 무한책임의 자세를 마땅히 지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래서 본인(송 전 대표)이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

속히 입국해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할 과정을 밝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전직 당 대표로서 당에 어떤 부담이나 누를 끼칠 생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캠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건 몰랐건 간에 국민들과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소상히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일요일 심야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 대표의 국민 사과, 유감 표명과 함께 송 전 대표의 조속한 귀국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송 전 대표)이 거기에 상응하는 화답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자리에서 송 전 대표

출당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의엔 “지금은 지켜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께 사과와 유감을 표하고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 필요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검찰의 신속한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당 차원 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상응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은 이걸 지켜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내용을 입장을 지켜보고 국민이나 당이 납득 어렵고 수용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맞춰 얘기해야 앞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관련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다른 이들에 대한 조치를 두고서도 “아직은 사실관계에 대해 달리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지켜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여당에서도 검찰 수사를 언급했던 취지로 말하면서 “우선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행법 위반, 당헌당규 배치 행동이 있었다면 상응 조치를 취하는 건 공당으로서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저는 시점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응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7일)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프랑스 체류 중인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공식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의혹 확산 국면에서 핵심 관련자로 오르내리고 있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은 불가피하다는 데 당 내 공감대가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 전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심전심으로 의견이 모아

진 것”이라며 “일찌감치 원내 의견을 모아서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대표께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여러 의원들께 당 대표 또는 여러 최고 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오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런 게 모여서 일요일 저녁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견이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4월16일 통화에서 당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송 전 대표도 본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이슬기자

## ‘영광군의회, 서초구의회’ 우호협력 증진 간담회 개최

고향사랑 기부제 및 농·특산품 판로 방안 등 논의  
오세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영광군 방문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7일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와 우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이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농·특산품 판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정 공동 관심 사항 등 주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영광군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서초구 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영광군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참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서초구의회 오세철 의장은 방문단을 기쁘게 맞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앞으로 영광군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양 기관 간 교류 강화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서초구 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25일에 ▲주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정보 공유, ▲공동 현안사항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발굴, ▲지역 축제·문화·관광상품 홍보 및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우호 교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여순사건 진상규명 늦어지고 있어”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남도지사, 이하 ‘실무위원회’)의 조사인력 부족으로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원들을 조속히 증원할 것을 호소했다.  
지난해 1월 21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실무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신고·접수한 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전남

도 및 6개 동부권 시군 기간제근로자 42명을 채용하여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진상조사 개시 2022년 10월 5일부터 4월 현재까지 조사완료 실적은 신고·접수 6,826건 대비 760건으로 6개월 동안 9.8%에 그친 수준이다.  
월평균 112건에 불과한 조사 진행 속도를 보면 산적해 있는 6,156건을 조사하는데만 무려 4년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어렵게 시작된 진실규명 조사 기한이 2024년 10월 4일까지 1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위원회의 늦장 조사로 인해 고령 유족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4년 10월 4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에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6개월 이내 작성해야 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